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있어 지역주민 집단차이에 따른

12)서 휘 석*** · 정 현 옥**** · 고 경 훈****

(목 차)

- I. 서 론
-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 III. 방사선이용연구센터 갈등사례 개요와 조사대상자 집단특성
- IV. 사례의 분석
- V. 갈등이슈에 대한 집단간 차이에 따른 PR
- VI. 결 론

비선호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갈등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의 지적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갈등 당의 의사소통 부족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부재는 저항을 불러와 정책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비선호우 정부가 그 안전성을 역설해도 지역주민들이 이를 위험시설로 간주하여 효율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둘째 지역주민들을 분류하여 차별화된 PR전략을 구한다. 본 논문은 동일한 갈등사례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구분이 있음을 따라서 이를 고려한 대응전략이 갈등해결의 효과적 처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주제어 : 입지갈등, PR, 의사소통, 정책순응, 정책불응

* 본 연구는 2002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 원광대 정치행정언론학부 교수

*** 원광대 정치행정언론학부 교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I. 서론

지방자치 실시 이후로 우리 사회의 정치적 환경변화는 그동안 일단 결정되면 별다른 문제없이 집행되었던 국책사업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즉, 과거에 우리나라 국책사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결정(decide)-발표(announce)-집행(implementation)'이라는 정책과정의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위험시설 입지의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예는 최근 전북 무안에서 원자력 폐기물 처분장 건립을 둘러싸고 발생한 정부와 주민간 갈등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위험시설의 입지를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결정된 사업의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지역주민의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사업시행주체인 정부와 사업의 집행으로 피해를 입게된다고 주장하는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많은 국가적 비용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유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무안의 원전수거물 센터입지 갈등사례나 쓰레기 매립장 건립과 같은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읍 첨단 방사선이용연구센터 입지를 둘러싸고 진행된 지역사회 내의 갈등을 분석하고, 시설 입지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얻기 위한 변수로 무엇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였는지를 논의하였다.

이제까지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많은 연구들은 갈등원인을 주로 환경문제, 지가하락과 같은 이해관계,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 시설물의 안전성 등에서 찾았다. 이러한 입장은 갈등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에 대한 처방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이었으며, 이러한 접근은 갈등해결을 어렵게 하였다. 즉,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 처방적인 접근과 다른 절차적이고 과정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며, 이는 입지시설 건립의 정당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사업자와 지역주민들간 충분한 쌍방향적인 의사소통과 같은 변수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는 상황을 간과한 측면이 크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의 주체는 입지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업자나 전문가들은 입지시설의 일방적인 안전성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오히려 전문가나 사업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신만 증폭시켜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하였다. 또한 입지시설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정도에 따라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나 그간 입지시설과 관련한 많은 PR은 이들

집단을 동일집단으로 간주하여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그 효과성이 의심된다. 비선호시설 입지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들의 세분화에 따른 지역사회관계 전략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정음 방사선이용센터 입지갈등에서 지역주민들을 구분해 보고, 갈등이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간의 차이 발견과 세분화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에 맞는 PR전략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논의를 하고 한다.

본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현지조사,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음의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의 건립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통계자료, 정부문서, 신문, 잡지기사, 연감, 주민 및 다양한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유인물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파악을 위해 설문조사와 더불어 관련 당사자들과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갈등양상에 대한 설명변수로 대체로 사회제도와 갈등당사자 집단의 인식 변수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제도 변수들에 연구로는 고경훈(2000), 김인철과 최진식(1999), 안성민(2000), 박기복(1997), 윤근섭과 송정기(1997), 이시경(2001), 정준금(2000)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고경훈은 성남시 저유소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전개된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및 지방정부가 관련된 갈등을 전략중심으로 다루었으며, 갈등당사자의 집단인식 차원에서는 김진욱(1997), 서희석(1995), 윤영채와 전주상(2000) 등의 연구가 있다. 윤영채와 전주상은 비선호시설입지갈등의 원인이 갈등당사자간 기본적인 인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간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어떠한 요인들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지식도 많이 축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또 다른 변수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

한 관점에서 사회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며, 이 접근은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지역사회 관계 접근이나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입지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시켜주는 전략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사업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입지시설물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의 홍보가 얼마나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사업자의 PR전략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얼마나 유용했는지 등을 통해서 갈등당사자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려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제까지는 입지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는 주로 일방적이고 지역주민들을 하나의 동일집단으로 인식하여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간 집단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들 집단간에 차이가 발견된다면, 사업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세분화에 따른 구체적 PR전략이 수반될 때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완화 또는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2. 비선호시설입지 갈등원인과 이슈

1) 갈등원인으로 의사소통의 부재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은 그 성질상 다양하고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특수성과 개별성을 지닌다.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세분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우리사회의 민주화 성숙으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둘째,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대한 주민의 피해의식과 불신감이다. 셋째,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즉 개발이나 불균형을 해소할 다각적인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넷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가 심화되었다. 다섯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정기구 및 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21).이외에 D.Pepper, O'Riordan, Jeans 등은 사람간 인식차이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는다. 같은 사물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교호작용을 하게 되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식된 환경은 보통 실제 환경의 모든 것을 포함하지 못하고, 그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포함하여 인간의 의식에 의해 창조된 가공의 요소만을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환경은 문화적 여파를 통해서만 볼 수 있으며, 과거의 경험과 관찰에 의해 굳어진 제한과 태도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Jeans, D., 1974: 36-40). Wildavsky & Douglas는 집단간 갈등의 원인을 집단간 문화의 차이에 있다고 보았다(Wildavsky, Douglas, 1982).

이렇게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앞서 논의한 갈등원인보다는 정책집행자와 지역주민들간에 비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주요 지역 갈등의 원인으로 보았다. 정책의 내용이 지역주민에게 명료하게 전달되지 못할 때 지역주민들의 정책불응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로부터 지역주민집단에 대한 의사전달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발신자의 왜곡된 전달, 수신자의 잘못된 이해, 전달체계의 붕괴나 과도한 정보량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의사소통은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의견, 정보, 감정 등의 교환을 통하여 공통적 이해를 이룩하고 수신자 측의 의식, 태도,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 의사소통의 핵심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수용자 또는 상대방이 의사소통을 행한 사람의 메시지를 이해했을 때 비로소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쌍방향 의사소통은 행정조직의 정책결정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주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여론형성 및 수렴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일방적이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정책집행대상자의 불응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유형의 불응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금 더 명확한 정책내용을 조금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대상집단에게 전달하여, 정책대상집단이 정책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2) 갈등 이슈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은 주로 지역에 입지하는 시설물이 갖는 안전성 즉, 기술적 불확실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된다. 의존할만한 과학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인식차이는 집단간 갈등으로 제기된다. 갈등이슈의 불확실성이 높고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집단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집단간 갈등 정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문제해결에 대한 선택이 없을 경우 더욱 가중되며,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험(risk)을 들 수 있다(Mary Douglas, Aaron Wildavsky, 1982: 5).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장으로는 크게 기술적 환경주의와 생태적 환경주의로 구분된다(D, Pepper, 이명우 외 2인, 1989: 72-201). 기술적 환경주의는 과학과 과학을 발전시키는 인간의 능력과 우월성을 믿으며, 이러한 믿음 속에는 과학자,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이들은 안전에 관해서도 기술적으로 안심할 수 있으며 앞으로 기술개발과 과학의 발전

에 힘입어 언젠가는 전혀 위험이 없는 상태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들은 경제발전을 선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험처리시설의 입지에 실질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생태적 환경주의는 전문가들의 위험평가는 불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입지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도 의심을 한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위험시설물이 입지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생태적 환경주의자들은 위험시설물이 지역사회에 입지하는 것을 반대한다.

안전문제를 가진 시설물의 입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갈등해결을 도모하는 기술적 환경주의 입장이라면 지역주민들은 정보공개, 주민참여와 같은 절차적인 관점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생태적 환경주의 입장이다.

이슈의 중심성은 개인의 물질적 복리, 사회경제적 위치, 자존심 등의 요소에 위협을 주는 지의 여부이다(Merton Deuth, 1991: 39). 어떤 시설의 입지가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크게 해친다고 생각할수록, 지역주민들에게 있어 그 문제는 중요하고 경직된 문제로 인식되기 쉬우며 갈등해결을 어렵게 한다. 비선호시설의 입지로 지역주민들은 지가하락, 농산물 하락, 환경오염, 위험감수 등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효과적 의사소통을 위한 PR과 공중 세분화

1) 지역사회관계

지역사회의 개념은 세 가지 측면에서 거론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를 지형학적 위치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학적 위치로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을 일종의 지형학적 테두리로 묶어 단일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둘째, 지역사회를 조직체적 공동체로 보는 것이다. 이 관점은 한 지역사회를 각 구성원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조직체들의 집합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지형학적 경계선과 그 속의 각종 조직체들의 결합으로 지역사회란 개념이 좀더 현실적으로 의미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앞의 두 개념을 종합한 것으로 지역사회를 이러한 지역 내의 조직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활동사항이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요약하면, 지역사회란 단순한 행정적인 지형학적 경계선을 명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세계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관계는 지역사회의 복잡한 개념을 반영하고, 한 지역사회의 환경 내에서 지역사회의 각 요소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들(linkages)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Grunting & Hunt, 1984). 따라서 지역사회관계는 정부가 지역사회에 특정 정책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활동사항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Peak는 지역사회관계를 일정한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의 조직이 자신과 지역사회의 상호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환경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활동하는 지속적 참여과정이라고 한다(Peak, 1978: 65). 즉, 지역사회 관계란 한 조직이 지역사회를 목표 공중으로 하여 그것의 지지를 얻고 그러한 환경형성을 목적으로 계획되어지는 활동들을 의미하며, 그 활동의 방향은 상호이익적, 지속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역사회 관계활동은 조직의 일방적인 홍보(弘報)·공보(公報)활동이 아닌, 조직의 지지기반과 환경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이득을 주는 활동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활동은 조직이 지역사회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는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차원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경영인을 위한 강연을 개최한다든가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교육적 차원, 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직을 시찰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사회 미디어(라디오, TV, 신문, 잡지 등)를 초대하는 등의 오픈 하우스(open house)차원 등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을 "지형학적 위치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Kruckereberg, 1988)으로 정의하는 전통적 관점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관계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모호하다. 왜냐하면, 전통적 관점의 지역 안에서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따라서 그들의 기대와 욕구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조직의 우호적인 지역사회 관계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해당지역이 갖는 특수성과 욕구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당지역 안의 다양한 조직체들과 구성원들의 욕구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조직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지역관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다양한 공중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조사가 요구되며, 이를 기초로 다양한 구성원들의 욕구와 쟁점에 적합한 지역관계 활동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공중의 개념과 세분화

PR에서 공중이란 한 조직의 행동과 정책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거나 또는 그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의견을 가진 집단을 의미한다. 차베근 등

에 의하면 공중은 PR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어떤 사물에 대하여 특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인간집단을 뜻한다(차배근 외, 1992: 317). 정치학대사전에 의하면 “공중은 특정한 쟁점이나 사건 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입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그들의 관심이 어떤 형태로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표명되어지고 또 그들의 관심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되어지는 다수의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한다(정치학대사전, 1984: 129).

듀이(Dewey)는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동을 조직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로, 블러머(Blumer)는 “어떤 관점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면서 토론에 참여하여 해결하려는 다수의 각계각층의 사람”을 공중으로 정의한다. 즉 공중은 이슈에 직면해 있고, 이슈에 따라 입장이 양분되어 있으며, 이슈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려는 집단이다. 공중을 보는 시각은 시기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관통하는 공통점은 공중이 어떤 이슈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나 ‘이익’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특정정책과 관련된 공중을 확인하기 위한 이론으로 그루닉이 1982년에 발표한 논문 ‘The message-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communication behavior of organization’에서 제안한 유형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의 기본내용은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수준이라는 독립변인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행동(정보처리, 정보추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공중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독립변인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정보를 처리하는 소극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인식이란 한 개인이 상황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내가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관여수준은 이슈가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특정 이슈가 나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제약인식은 문제가 되는 이슈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외부적인 제약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정도이다. 자신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문제인식과 관여수준이 높고, 제약인식이 낮으면 더 자주 정보를 추구하고 정보를 처리하려고 할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그 상황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동기를 자극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외부적인 제약을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보다 정보를 덜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루닉은 이들 기준의 조합을 통해서 공중을 잠재적 공중, 인식공중, 적극적 공중, 비공중으로 세분화하였다.

〈표 1〉 공중의 유형

공중유형	기준의 조합
적극적 공중(active public)	문제인식, 참여도가 높고 계약인식이 낮음
인식공중(aware public)	문제인식이 높고, 참여도가 낮음 계약인식이 높음
잠재적 공중(latent public)	문제인식과 참여도가 모두 낮음
비공중(non-public)	이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음

그루닉의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비선호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정책대상 집단은 동일한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갈등이슈나 참여도에 있어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집단간 발견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PR전략이나 홍보전략이 동일한 획일적인 내용보다는 집단간 내용을 달리하는 PR전략이나 지역주민 설득전략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례에서 방사선센터가 입지하는 마을과 인근지역을 구분하여, 이들간 갈등이슈에 대한 지역주민간 집단차이가 발견되는지를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 PR전략을 논의하였다.

Ⅲ. 방사선이용연구센터 갈등사례 개요와 조사대상자 집단특성

1. 사례의 개요

2001년 5월 8일 정읍 신정동이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건립지역으로 발표되면서 이 시설의 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전개되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서 정읍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이 시설물이 갖는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사업계획 철회를 주장하였다. 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북도, 원자력 연구소, 정읍시는 정읍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

어서 이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대응 하였다. 그러나 시설이 입지하는 해당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시설입지를 반대하였으나 마을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원자력 연구소의 견학 이후에는 마을 여론이 찬성쪽으로 기울면서 정책집행은 탄력을 받았으나 여전히 시민단체와 인근지역주민들의 반대는 계속되었다.

이 문제는 6.13 시장선거와 맞물리면서 새로 당선된 유성엽 시장은 시민대토론회를 통해서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시민단체측과 합의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이제까지 찬성과 반대측의 주장이 반복되었으며 의사결정을 할만한 결론이나 합의 없이 토론회가 종료되었다. 이후 정읍시 하재룡 부시장은 “그동안 정읍시와 원자력 연구소에서 공개토론회와 전문가들의 자문, 반대측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많은 검증절차를 거친 만큼 이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전북일보, 전라일보, 2002. 11. 2).

원자로와 폐기물 설치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서 반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센터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가동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는 것이었다(정읍신문, 2002. 11. 6. 제601호). 이러한 시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부 반대는 있었으나 시민대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시설입지공사를 계속하였다.

2. 설문응답자의 집단 특성

설문응답자의 집단특성에서 지역주민들 집단은 연령적으로 60대 이상이 50%이상인 반면 정읍시 주민들은 30,40대가 주류를 이루는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서도 지역주민들은 무학이나 초등졸업이 50%를 이루는 반면 정읍시 주민집단은 고졸이 50.3%, 대졸이 41.4%를 이루어 큰 학력차이가 있다. 직업적으로도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인 반면 정읍시 주민들은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처럼 두 집단간 인구통계학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지역주민		정읍시 주민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성 별	남 자	65	58.0	77	45.6
	여 자	47	42.0	92	54.4
연 령	20대	12	10.7	33	19.5
	30대	15	13.4	65	38.5
	40대	15	13.4	47	27.8
	50대	12	10.7	11	6.5
	60대이상	58	51.8	13	7.7
학 령	무 학	23	20.5	0	0
	초 등	33	29.5	6	3.6
	중 등	12	10.7	8	4.7
	고 등	26	23.2	85	50.3
	대학이상	18	16.1	70	41.4
직 업	농 업	45	40.2	2	1.2
	전문직	5	4.5	15	8.9
	생산직	3	2.7	1	0.6
	사무직	1	0.9	19	11.2
	자영업	11	9.8	71	42.0
	서비스직	5	4.5	32	18.9
	공무원	3	2.7	2	1.2
	학 생	2	1.8	6	3.6
	주 부	18	16.1	15	8.9
	무 직	13	11.6	2	1.2
	기 타	6	5.4	4	2.4
거주기간	1년미만	0	0	5	3.0
	5년미만	9	8.6	18	10.7
	10년미만	4	3.6	22	13.0
	15년미만	2	1.8	10	5.9
	16년이상	97	86.6	114	67.5
평균소득	100만이하	89	79.5	54	32.0
	100-199	10	8.9	56	33.1
	200-299	10	8.9	38	22.5
	300-399	3	2.7	14	8.3
	400만이상	0	0	7	4.1
총 계		112	100.0	169	100.0

3.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본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모집단을 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립지에 근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과 정읍시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방사선이용연구센터의 설립지와의 거리 정도에 따라 이해관계의 정도나,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2002년 12월 28일에서부터 2003년 1월 2일까지 약 6일 동안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32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들 중 회수되지 못한 설문지와 정확한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81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이슈에 대한 지역주민 집단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의 성격에 따라 t-검증과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여 두 집단간 차이가 있는 지를 논의하였다.

IV. 사례의 분석

1. 주요 갈등당사자

방사선이용연구센터 입지갈등과 관련된 주요 당사자로는 원자력연구소, 정읍시, 지역주민, 시민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력연구소는 이 시설의 입지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이제까지 원자력은 주로 발전용으로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앞으로는 비발전분야에서 원자력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대비해야 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읍 신청동에 입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입지결정과 함께 방사선이용연구센터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환경오염도 거의 없다는 입장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원자력연구소의 견학, 주민설명회 등과 같은 다각적 노력을 하였다.

정읍시는 점차적으로 지역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읍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물이면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 시민단체와의 합의된 공청회를 통하여 시의 입장을 결정하였다. 정읍시는 주로 방사선센터 부지매입을 담당하였다.

지역주민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다르게 표출되었다. 시설물이 입지하는 금구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반대입장이었으나 원자력 연구소의 견학과 경제적 보상 이후로 그

들의 입장은 찬성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입지시설의 아래쪽인 구면마을은 반대정도가 강했다. 그 이유는 구면마을에 흐르는 지하수가 상류에 위치하는 방사선이용연구센터의 입지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면마을은 찬반으로 의견이 나누어졌으며, 반대하는 주민들은 금구마을과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신면에는 아무런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정읍시의 일반시민들은 대체로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여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읍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방사선이용센터의 입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구심점이 부족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반대운동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였다. 이들은 방사선센터 입지반대를 위한 시민연대, 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방사선센터백지화범시민연대 등을 구성하여 활동을 지속해 갔다. 이들은 정읍시와 협의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 토론회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2. 갈등원인

사례에서 갈등 요인으로는 여러 요인들 들 수 있으나 주요한 갈등원인으로는 방사선이용연구센터에 대한 집단간 인식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시설입지자인 원자력연구소, 정읍시, 전라북도는 첨단 방사선이용연구센터가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산업의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전라북도, 2002: 67-72).¹⁾ 입지시설의 안전성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설득은 주로 원자력연구소에서 담당하였다. 2001년 5월 30일 입암면 사무실과 상교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입지시설 건립지 예정지 주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연구소 방문 등을 추진하였다. 이들이 수행한 주요 설득활동의 내용은 첫째, 입지시설은 원자

1)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로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영향을 미쳐 2010년에는 약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효과로는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의 이용기술은 국민의 보건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기술적 효과로는 방사선 기술을 연계한 새로운 치료, 진단용 의약품 생산기술과 환경친화성 농산물 육종 및 농업환경 개선기술의 개발에 기여할 것이며, 식량자원의 효율적 이용기술과 고부가가치 신소재/기능성제품 생산관련 첨단기술을 축적하여 산업화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력발전소와는 무관한 비발전연구분야로 농업·식품·생명과학 등에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관련기술을 연구하고 산업에 연계 육성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이 분야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둘째, 정읍에 핵원자로 설치,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및 대덕연구단지의 원자로 이전 등과 같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어 유감스럽다. 셋째, 첨단방사선센터가 정읍에 입지함으로써 방사선 기술의 산업화와 수출로 인한 고부가가치 창출, 첨단과학도시로서의 위상제고, 고용효과 증대와 고급인력 유치, 국제심포지움 행사 개최로 세계적 이미지의 무각 등을 주장하였다.

입지시설 추진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연합, 동이학교, 문사정 등 정읍 시민단체들은 '우주의 배꼽, 정읍을 원자력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없다'는 의견에 합의를 도출하고, 이어 '정읍방사선 핵원자로 유치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방사선과 방사선조사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핵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등 사례를 담은 각종 자료 및 사진물 등을 공개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정읍시민연대, 청년환경센터 등은 입지시설의 반대 결기대회에서 제시한 주요문제는 먼저 시설의 위험성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루마니아의 사례를 들어 연구용원자로와 감마선 조사시설 등 원자력 관련시설의 잠재적 위험성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된 주장은 최근 수년 사이 비파괴검사 및 의료용 방사선동위원소의 취급부주의로 수 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며, 여러 가지의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의 잠재적 위험성이나 핵폐기물 처리문제에는 항상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사업시행 주체가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용 원자로가 들어오고 관련 업체가 입주했을 때를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300-500명의 연구인력과 1조원의 경제적 무가가치 창출은 턱없이 과장된 것이며, '청청한 생태문화관광도시' 정읍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입게되는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입지시설에 대한 커다란 인식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갈등당사자간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설문조사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방사선이용연구센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입지시설에 대한 정보는 주로 이웃주민들의 소문이나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서 입지시설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표 3, 5>참조) 이러한 정보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입지시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대한 장애물이 되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적수준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입지시설 추진자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주장만이 반복됨으로써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였다.

3. 갈등이슈

사례의 주요이슈는 먼저 입지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집단간 인식의 차이에서 제기되었다. 방사선을 얻기 위한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집단간 이해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등의 핵물질 분해 시 나오는 방사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핵물질에 오염되면 그 지역은 반영구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음의 방사선이용 연구센터도 이와 비슷한 성질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와 비슷한 감마선 조사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주요한 갈등이슈이었다. 이 조사시설에 사람이 노출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 조사시설은 두께 1.3m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다. 감마선은 두꺼운 콘크리트를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주 확률적으로 작은 것이지만 이 시설물이 갑자기 폭발되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인명피해는 클 것으로 생각하였다. 더불어 코발트 60을 보관하는 탱크 속의 물이 배출되면 주변지역의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은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지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구체적 갈등이슈에 대해서 지역주민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 입지시설 정보 제공에 대한 집단인식

지역주민들은 정음지역에 입지하는 방사선이용연구센터에 대한 사업주체측의 정보제공활동에 대해서 간접적인 불만을 표시하였다. 가령, 주민들에게 입지시설과 관련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의 81.5%가 '불충분'하였다고 대답한 비해서 '충분'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5%에 지나지 않아, 지역주민의 절대다수가 정책집행 주체측에서 제공하는 정보제공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표 3〉 정보제공에 대한 지역주민인식

	빈도수	비율(%)
매우충분하다	2	.7
충분하다	12	4.3
보통이다	38	13.5
불충분하다	135	48.0
아주불충분하다	94	33.5
합 계	281	100.0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 입암면과 정읍시 주민들에 대한 정보제공 인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 기관의 정보제공에 대한 주민집단간 차이에 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집단통계량〉

	거주지	N	평균	표준편차
기관의 정보제공	입암면	112	4.24	.79
	정읍시내	169	3.99	.86

〈독립표본 검증〉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기관의 정보제공	1.042	.308	2.447	279	.015	.25	.10

정보제공에 대한 입암면 주민과 정읍시민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처럼 F값이 1.042이고 유의확률 값이 0.308이므로 $P>0.05$ 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단의 분산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t값은 2.447, 자유도는 279에서 양측검정의 유의확률이 0.015로서 0.05보다 작으므로 5%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자력연구소 정보 제공에 대한 입암면과 정읍시민의 인식은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입지시설 정보원에 대한 집단비교

지역주민들이 방사선이용연구센터에 대한 정보의 습득은 주로 신문이나 TV와 같은 대중매체(39.9%)와 이웃사람이나 주위 소문(30.6%)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약 70%를 상회하고 있는데 비해서, 단지 8.2%의 응답자만이 사업시행 주체측의 PR활동에 의해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7.8%의 응답자는 시민단체의 유인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정보획득수단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빈도수	비율(%)
원자력 연구소 견학	13	4.6
주민설명회	10	3.6
정읍시의 유인물이나 인터넷	30	10.7
대중매체	112	39.9
시민단체의 유인물	22	7.8
지방선거	8	2.8
이웃사람	86	30.6
합 계	281	100.0

분석결과를 통해 방사선이용연구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는 원자력연구소나 정읍시의 그간 PR활동이 매우 미흡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였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사업주체인 원자력연구소나 정읍시

로 부터 정보를 습득하였다는 응답자의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난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시설 물의 입지에 대한 편향된 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입지시설에 대한 정보획득수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입암면 주민들은 주로 이웃사람이나 소문에 의해서, 대중매체 등이었다. 그리고 연구소 견학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읍시 주민들은 주로 대중매체에 의해서 입지시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증을 시도하였다.

〈연구가설2〉 정보획득 수단에 따라 거주지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식은 차이가 있다.

〈표 6〉에 의하면 교차분석 결과 입암면 거주자 112명과 정읍시 거주자 169명중 원자력 연구소 견학을 통한 정보획득은 입암면 거주자가 12명인데 비해 정읍시 거주자는 1명에 불과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극히 미미하여 전체 정보획득 수단의 4.6%에 불과하여 연구소 방문을 통한 사업 시행자측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빈도분석에 나타난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주로 정보를 획득하는 통로는 이웃주민을 통해서였다.

특히 입암면 거주주민은 48.2%가 이웃을 통해 방사선이용연구센터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18.9%에 그친 정읍 시내 거주민들과 대조를 보였다. 이는 방사선센터 건립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입암면 주민들이 공식적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보다는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정보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statistically significant)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값을 구하여 가설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카이제곱 값은 54.368이고, 자유도는 6으로 나타났다. 신뢰수준 95%에서 유의수준 0.05일때 카이제곱 값은 54.368, p값은 0으로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거주지역에 따라 정보획득 수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 6〉 정보획득수단 거주지 교차표

			거주지		전체
			입암면	정읍시내	
정보 획득 수단	원자력연구소 견학	빈도	12	1	13
		정보획득수단의 %	92.3%	7.7%	100.0%
		거주지의 %	10.7%	.6%	4.6%
		전체 %	4.3%	.4%	4.6%
	주민설명회	빈도	5	5	10
		정보획득수단의 %	50.0%	50.0%	100.0%
		거주지의 %	4.5%	3.0%	3.6%
		전체 %	1.8%	1.8%	3.6%
	정읍시의 유인물이나 인터넷	빈도	6	24	30
		정보획득수단의 %	20.0%	80.0%	100.0%
		거주지의 %	5.4%	14.2%	10.7%
		전체 %	2.1%	8.5%	10.7%
	대중매체	빈도	25	87	112
		정보획득수단의 %	22.3%	77.7%	100.0%
		거주지의 %	22.3%	51.5%	39.9%
		전체 %	8.9%	31.0%	39.9%
	시민단체의 유인물	빈도	8	14	22
		정보획득수단의 %	36.4%	63.6%	100.0%
		거주지의 %	7.1%	8.3%	7.8%
		전체 %	2.8%	5.0%	7.8%
	지방선거	빈도	2	6	8
		정보획득수단의 %	25.0%	75.0%	100.0%
		거주지의 %	1.8%	3.6%	2.8%
		전체 %	.7%	2.1%	2.8%
	이웃사람	빈도	54	32	86
		정보획득수단의 %	62.8%	37.2%	100.0%
		거주지의 %	48.2%	18.9%	30.6%
		전체 %	19.2%	11.4%	30.6%
전체		빈도	112	169	281
		정보획득수단의 %	39.9%	60.1%	100.0%
		거주지의 %	100.0%	100.0%	100.0%
		전체 %	39.9%	60.1%	100.0%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54.368	6	.000

3) 입지시설 성격에 대한 지역주민집단간 인식비교

사업시행 주체인 원자력연구소와 정읍시는 방사선이용연구센터가 정읍에 입지한다는 정책이 결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기술적 안정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사업시행주체의 이러한 노력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졌는가?

많은 지역주민들은 정읍에 건립되는 방사선이용연구센터를 '핵발전소' 시설처럼 환경위험 시설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령, '입지시설물을 어떠한 시설로 인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위험시설이라고 응답한데 비해, 사업시행측에서 주장하였던 것처럼 첨단시설로 인식하는 비율은 21.7%만을 보여 그동안 원자력연구소와 정읍시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당하여 기울여 온 홍보노력이 기대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방사선이용연구센터를 첨단시설이 아닌 위험한 시설로 인식하는 것은, 이 시설물의 입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협조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7〉 입지시설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빈도수	비율(%)
단순한 연구소	12	4.3
경제적 활성화를 가져오는 첨단시설	61	21.7
매우 위험한 시설	118	42.0
약간 위험하나 유용한 시설	76	27.0
기타	14	5.0
전체	281	100.0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입지시설에 대해서 입암면 주민들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반면에 정읍시 주민들은 입암면 주민들보다 입지시설이 첨단시설이거나 혹은 위험하지만 정읍시에 매우 유용한 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첨단센터에 대해 입암면 거주자의 54.5%가 매우 위험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단순한 연구소 혹은 경제적 활성화를 가져다주는 시설로 인식하는 비율은 각각 5.4%와 16.1%에 불과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첨단센터를 경제적 활성화를 가져오는 시설로 인식하는 정읍시민의 비율 25.4%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주지에 따른 첨단 방사선연구센터에 대

한 인식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카이제곱 검증을 시도하였다.

〈연구가설〉 거주지에 따라 연구센터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다.

카이제곱 검증 결과는 〈표 9〉에 나타난 것처럼 카이제곱 값은 14.93이고 자유도는 4로서 유의도는 0.005이다. 유의도가 95% 신뢰구간에서 0.05보다 작으므로 두 변수간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지 않으므로 거주지에 따라 연구센터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표 8〉 인식·거주지 교차표

		거주지		전 체	
		입암면	점읍시내		
인식	단순한 연구소	빈도	6	6	12
		인식의 %	50.0%	50.0%	100.0%
		거주지의 %	5.4%	3.6%	4.3%
		전체 %	2.1%	2.1%	4.3%
	경제력활성화를 가져오는 첨단시설	빈도	18	43	61
		인식의 %	29.5%	70.5%	100.0%
		거주지의 %	16.1%	25.4%	21.7%
		전체 %	6.4%	15.3%	21.7%
	매우 위험한 시설	빈도	61	57	118
		인식의 %	51.7%	48.3%	100.0%
		거주지의 %	54.5%	33.7%	42.0%
		전체 %	21.7%	20.3%	42.0%
약간 위험하나 유용한 시설	빈도	21	55	76	
	인식의 %	27.6%	72.4%	100.0%	
	거주지의 %	18.8%	32.5%	27.0%	
	전체 %	7.5%	19.6%	27.0%	
기타	빈도	6	8	14	
	인식의 %	42.9%	57.1%	100.0%	
	거주지의 %	5.4%	4.7%	5.0%	
	전체 %	2.1%	2.8%	5.0%	
전체	빈도	112	169	281	
	인식의 %	39.9%	60.1%	100.0%	
	거주지의 %	100.0%	100.0%	100.0%	
	전체 %	39.9%	60.1%	100.0%	

〈표 9〉 카이제곱 검증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4.930	4	.005

4)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집단간 인식비교

방사선이용연구센터가 수행 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방사선조사식품의 생산활동이다. 원자력연구소와 정읍시는 그동안 방사선조사식품의 안전성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PR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방사선조사식품은 식품의 안전성이 아직 입증되지 못하여 불안정한 식품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하여 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은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해서 '안전'보다는 '불안전'한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9〉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빈도수	비율(%)
매우 안전하다	11	3.9
비교적 안전하다	29	10.3
보통이다	52	18.5
비교적 위험하다	70	24.9
매우 위험하다	32	11.4
알 수 없다	87	31.0
합 계	281	100.0

즉, 방사선조사식품이 '비교적 위험'하다거나 '아주 위험'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6.3%인데 비하여, '아주 안전'과 '비교적 안전'하다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은 14.2%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시설물의 건립을 시행하는 측인 원자력연구소나 정읍시측의 PR활동과 이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측이 수행하는 PR활동 과정 중에서 시민단체측의 설득력이 높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표 10〉 조사식품 안전성에 대한 주민집단간 차이
〈집단통계량〉

	거주지	N	평균	표준편차
조사식품 안전성	입암면	112	4.67	1.49
	정읍시내	169	3.93	1.44

〈독립표본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조사식품 안전성	.893	.345	4.159	279	.000	.74	.18

방사선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입암면 주민과 정읍시민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위의 〈표10〉에서처럼 F값이 0.893이고 유의확률값이 0.345이므로 $P>0.05$ 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가설은 기각되지 못한다. 따라서 분산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t값은 4.159, 자유도는 279에서 양측검정의 유의확률이 0이어서 0.05보다 작으므로 5%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방사선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입암면과 정읍시민의 인식은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5) 입지시설 정보제공자에 대한 불신

지역주민들이 비선호시설로 인식하는 시설물에 대한 입지정책은 정책을 집행하는 시행주체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은 방사선센터의 건립정책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연구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연구소에 대한 정읍시 지역 주민들의 불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원자력연구소에 대한 신뢰도에서 응답자의

26.7%가 '불신'에, 9.6%는 '매우 불신'에 응답하고 있어 사업시행 주체이자 PR활동의 당사자인 원자력연구소에 대해 36.3%의 지역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집행 담당자에 대해 '불신'한다는 응답률은 '신뢰'한다는 응답률 18.5%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표 11〉 지역주민의 원자력연구소 신뢰도

	빈도수	비율(%)
매우신뢰	8	2.8
약간 신뢰	44	15.7
보통	127	45.2
불신	75	26.7
매우 불신	27	9.6
합계	281	100.0

사업주체인 원자력연구소에 대한 지역주민집단간 신뢰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12〉에서처럼 F값이 2.032이고 유의확률값이 0.155이므로 $P>0.05$ 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단간 신뢰도의 분산이 같다는 가설은 기각되지 못한다. 따라서 분산이 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t값은 3.404, 자유도는 279에서 양측검정의 유의확률이 0.001로서 0.05보다 작으므로 5%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자력연구소에 대한 입암면 주민과 정읍시민의 신뢰도의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12〉 사업주체에 대한 지역주민집단간 신뢰도의 차이

〈집단통계량〉

	거주지	N	평균	표준편차
원자력연구소	입암면	112	3.47	.91
	정읍시내	169	3.09	.91

〈독립표본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원자력연구소	2.032	.155	3.404	279	.001	.38	.11

6) 입지시설 반대활동 참여여부

입지시설물의 반대를 위한 주민들의 농성이나 집단시위에 참가한 경험에 대해서 대다수의 설문조사자 90.4%가 농성이나 집단시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방사선센터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정도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시키는 주민들은 9.6%에 해당하였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동정도를 지역별로 보면 방사선이용연구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시위나 농성에 참여 경험이 19.6%로 나타나 정읍주민들 보다는 시위나 농성에 참여 경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지역주민들의 반대활동 참여

	빈도수	비율(%)
있 다	27	9.6
없 다	254	90.4
합 계	281	100.0

이상의 논의에서 그루닉의 적극적 공중과 인식공중간의 차이가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방사선센터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인식에서는 입암면 주민이 정읍시민 보다 더욱 위험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그루닉의 적극적 공중과 인식 공중간의 차이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대활동에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입암면 주민들은 적극적 인데 반면 정읍주민들은 아주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이는 그루닉의 집단간 제약인식의 차이가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정보제공에 대한 인식과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에

서 입암면 주민들은 불충분하거나 아주 불신하는 것으로, 정읍주민들은 약간 불충분하거나 약간 불신으로 분석되어 그루닉의 관여도 변수가 적극적 공중과 인식공중간 차이가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갈등이슈에 대한 집단간 차이에 따른 PR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방사선이용연구센터 입지 사례에 있어 지역주민들은 갈등이슈에 대해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사례 분석에서 입지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그루닉의 적극적 공중과 인식공중간 갈등이슈에 대한 인식차이가 없다는 이론적 모형과 동일하였다. 입지시설의 위험성을 제외한 다른 갈등이슈에 대해서는 집단간 차이가 분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획일적인 지역주민관계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갈등당사자간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집단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세분화하여, 이들 집단특성에 맞는 PR이나 설득이 이루어져야 집단간 의사소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1. 홍보대상 집단 특성을 고려한 홍보

갈등이슈에 대한 PR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먼저 집단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이 농촌이고 주민들의 대부분이 노인계층이어서 방사선이나 감마선 조사시설의 안전성을 홍보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즉 이들에 대한 PR은 과학적인 전문용어보다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전달해야 한다. 또한 입지시설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주위의 소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다면 마을의 여론 주도층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이들을 주요 공략대상으로 선정하여 입지시설의 안전성을 홍보한 다음, 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입지시설의 안전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홍보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2. 주민집단이 관심 갖는 내용의 홍보

홍보내용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주로 입지시설의 기술적 안전성과 정읍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특히 입암면의 경우에는 고용창출에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홍보내용은 주민집단들이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홍보내용에 있어 일방적인 사업자의 주장만을 담을 것이 아니라 정보수용자가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수용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지시설의 설립을 목표로 한 설득적 PR과정에서, 사업추진자의 정보와 그 반대집단의 정보를 비교하여 전달하고 더 나아가 반대집단의 쟁점에 반박할 논거와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정보를 파악하고 판단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3. PR전문가의 배치

정읍 방사선이용연구센터 입지 사례에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은 주로 원자력 연구소의 방사선 관련 연구자들과, 정읍시의 건설이나 토목분야의 기술직 공무원들이었다. 입지시설의 기술적 안전성을 설명하는 데는 이들 인적 구성이 효과적일 것이나 입지시설에 대한 PR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홍보나 설득, PR 등의 전문가들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담당하여야 한다.

4. 주민집단 구분에 따른 PR

1) 지역주민에 대한 PR

지역주민은 방사선이용연구센터가 입지하는 해당 마을인 금구 거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을 지칭한다. 이는 그루너이 구분한 적극적 공중에 해당되며, 이들은 문제인식과 관여도가 높으며 제약인식이 낮은 특징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방사선센터의 사례에서도 시설입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많은 관심과 시설입지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는 태도가 높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주민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고령의 노인들이 주를 이루며, 이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또한 사회변화에 대한 거부가 강하고, 그들의 태도 및 의사결정은 마을 이장에게 의지

하고 있었고, 정보획득의 주요 수단으로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마을주민이나 소문 등에 의존하였다. 또한 주위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지니는 것을 꺼려 의사표현의 집단성을 보였다.

정읍시와 원자력연구소는 주로 주민설명회나 인쇄물 배포, 원자력연구소 견학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입지시설의 안전성을 충분히 홍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지역주민들은 입지시설에 대한 정보가 아주 불충분하다는 의견이었고, 이로 인하여 방사선이용연구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가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많은 지역주민들은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동일하게 방사선이용연구센터를 핵시설과 같이 매우 위험한 시설로 인식하였다.

방사선연구센터가 입지하는 금구마을 주민과 인근 마을 주민간에도 시설입지에 대해서 약간의 입장차이가 표출되었고, 이는 갈등해결을 어렵게 하였다. 예를 들어 방사선이용연구센터가 입지하는 금구 마을 주민들은 초기에는 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립에 강한 반대를 표시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원자력연구소 견학을 통해서 입지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하여 방사선이용연구센터의 입지에 대한 찬성으로 의견의 변화가 있었다(금구마을 이장과의 면담).

금구마을의 인근지역인 정해마을, 구면, 신면지역 주민들은 방사선이용연구센터 입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표출하였다. 이들의 주 반대 요인으로는 자기들의 거주지역이 금구마을과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닌데 금구마을에는 경제적 보상이 제공된 반면 그들 지역에는 경제적 보상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구면지역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방사선이용연구센터 예정 부지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염려가 시설입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처럼 입지시설이 들어서는 금구마을 주민들과 인근지역의 3개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나 이해관계 정도는 주민들간 시설입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어졌다.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먼저 입지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인하여 어떤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역주민들은 설문조사에서 원자력연구소가 제공하는 정보 보다는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였다. 이로 인하여 방사선이용연구센터를 핵시설로 매우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정보제공에 앞서 지역주민들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금구마을에서처럼 입지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사시설의 견학도 중요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금구마을의 3개 인근마을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방사선센터 직원의 일부를 지역주민으로 채용한다든지, 수입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이나 지역교육에 투자하는 등과 같은 것들이다.

2) 정읍시 주민에 대한 PR

여기서의 지역주민은 그루닉이 구분한 인식공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문제인식은 높지만 참여도는 낮고 제약인식은 높은 특징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일반 정읍시민들은 방사선이용연구센터의 입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참여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이 갖는 집단적인 특성으로 이들은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입지시설에 관한 주요 정보원으로는 대중 언론매체에 의존하였다. 방사선이용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위험성은 있으나 경제적 유용성은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들 집단 또한 입지시설 추진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정보에 대한 신뢰도 역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서 방사선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대한 긍정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는 의사전달 수단과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들과의 친밀성에 근거한 여론지도자 즉, 마을 이장을 통하여 의사전달을 하고 PR과정을 전개하였던 것과는 달리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에 대한 중립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성에 근거한 여론지도자, 방사선 관련 전문가 집단을 PR 수단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사례의 경우 시설의 성공적 입지를 위해서 정읍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위험성이 있지만 충분한 관리능력이 있으며, 이 시설이 정읍에 입지하는 경우 정읍시의 경제적 활성화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대중언론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PR전략이 요구되었다.

〈표 15〉 갈등이슈에 대한 집단차이와 PR전략

		지역주민(입암면)	정읍 일반 지역주민
갈 등 이 슈	정보제공 만족도	아주 불만족	불만족
	정보획득수단	이웃주민이나 이장	주로 언론이나 방송매체
	방사선센터에 대한 인식	위험한 시설물	위험한 시설물
	조사식품 안전성	아주 위험함	위험함
	정보제공자의 신뢰	아주 불신	약간 불신
	반대활동 참여 여부	입지시설에 대한 강력한 반대외사와 더불어 반대행동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강함	입지시설에 대한 반대외사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반대행동으로 참여하려는 정도는 매우 낮았음
집단 세분화에 따른 PR전략		여론주도층(마을이장)을 중심으로 홍보 알기 쉽게 충분한 정보제공 정보 신뢰성 제고 원자력 연구소 견학 경제적 보상과 인센티브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 관계 유지	대중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전문가를 통한 정보제공 및 신뢰성 제고 경제적 유용성 강조

VI. 결 론

지방자치제가 진전되면서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원인을 주로 이해관계, 주민참여, 입지시설의 안전성 측면에서 다루는 경향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주로 경제적 보상적 차원이나 입지시설의 안전성 보완 등이었다. 그러나 입지갈등의 많은 사례에서 입지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입지추진자가 주장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정읍 방사선이용연구센터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원자력연구소는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핵시설로 인식하여 매우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던 갈등원인의 변수로 정책추진자의 효과적인 PR이나 갈등당사자간 의사소통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지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주민집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의 여론지도층이 누구인지,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충분한 정보의 교류와 순환이 이루어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례의 분석결과 갈등이슈에 대한 지역주민 집단간 인식의 차이, 집단간 정보획득의 수단이 다른 점 등은 입지정책 추진자의 획일적인 홍보나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닌 집단구분에 따른 유효한 홍보와 설득수단을 선별하여 접근하여야 한다는 함의를 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세분화 작업을 바탕으로 이들이 갖는 특성이나 요구 등을 기초로 한 홍보나 지역주민관계 전략은 효과적인 입지정책의 집행과 갈등당사자간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며, 이는 입지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보다 완화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경훈(2000), 「지방정부 정책형성 분석」,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고영철·정연우 (2002), 지방행정홍보 매체의 현황과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학보」, 3(2): 197-234.
- 고영철(1992), 「지방행정PR에 있어서 지역신문의 역할」,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고영철(1998), 제주도 주요 정책관련 공중의 유형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 연구논총」, 10: 139-161.
- 권종록(2000.6), 상황이론을 적용한 목표 공중 분석에 관한 연구, 「홍보학 연구」, 4(1): 5-40.
- 김명호(1988), AIDS 홍보를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식개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5(1): 25-28.
- 박기록(1997), 하천의 상·하류지역간 물분쟁 해결유형: 부산시와 대구시의 분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1(4):227-243.
- 배미경(2002), 사이버퍼블릭의 특성과 유형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6): 69-83.
- 사득환(1997), 지방시대 환경 갈등의 해결 기제: 제3자 조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1(3): 187-201.
- 삼성경제연구소(1997), 「함께 풀어나가는 지역갈등」.
- 서희석(1995),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장곡취수장 사례를 중심으로, 「호남정치학회보」, 7: 41-59.
- 신호창·이두원(2002), 「행정PR원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호창·홍주현(2000), 정책에 대한 지식 및 오해와 태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살펴 본 공중세문화 캠페인 전략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1(2): 169-185.
- 안해균(1991),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국정홍보체제의 재구성 - 민주화 지방화 및 정보화시대에 대응해서-, 「서울대 행정논총」, 29(2): 101-123.
- 양영중·최안자(1999), 광주광역시 CI추진 전략의 연구, 「광주커뮤니케이션학회보」, 창간호.
- 오두범(1997), 행정홍보의 특성과 과제에 관한 고찰, 「홍보학연구」, 창간호: 168-186.
- 윤근섭·송정기(1997), 수원이용에 따른 지역이해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3: 195-221.
- 윤영채·전주상(2000),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정책추진자와 정책수용자간의 인식차이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0(2): 91-115.

- 이두원(1997). 기업의 대 지역사회 관계와 쟁점관리에 관한 연구. *홍보학 연구*, 창간호: 69-98.
- 이준일(1992).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홍보기법. *지방행정*, 41(464): 65-71.
- 박영사(1984). *정치학대사전*.
- 차배근외(1992). *설득커뮤니케이션개론*. 서울: 나남.
- 최윤희(2001). *PR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홍석·홍성만·주경일(2003). 사회적 갈등의 근거이론적 이해: 댐건설을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보*, 37(4): 169-191.
- 동아일보. (2000.7.18). 정음신문(제598호, 604호).
- 전북일보(2002.11.2, 2002.12.27, 2003.1.6)
- 방사선센터 유치반대 정음시민연대(2001.10.26).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유치반대성명서*.
- 방사선센터 시민단체(2002.10.15). *방사선센터 공개토론회자료*.
- 원자력 연구소(2002.5). *첨단 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명 자료*.
- JTV(2002.4) *정음방사선센터 갈등 토론 자료*.
- Coombs, F. S. (1981). The Bases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in J.G.Grumm and S.L. Wasby eds. *The Analysis Policy Impact*. Lexington: Heath.
- Douglas, M. and A. Wildavsky. (1982).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dwards, G. C. (1980). *Implementing Public Policy*.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 Gruning, J. E & Hunt. (1983). *Managing Public Relation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Jeans, D. (1974). Changing Formulations of the Man-Environment Relationship in Anglo-American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71: 36-40.
- Merton, D. (1973). *The Resolution of Conflict: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Process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